

이슈브리프 882호
(2026. 8.11)

미·중 딜레마와 대만 무기판매 보류

제882호

정현욱 hwcheng@inss.re.kr



국문초록

미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이 8월 4일 대만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대만 무기판매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초 역대 최대규모인 약 140억 달러의 대만 무기판매를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대만 안보가 미중 협상의 카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몇 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대중 농산물 수출 확대와 보잉 항공기 판매 등 중국과의 경제적 현안을 안고 있으며, 중동 정세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중국 역시 장기적인 미중 전략 경쟁에 대비해 첨단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전면적 충돌을 피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를 완전히 철회시키기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강도를 낮추고 무기판매 규모와 시기, 특히 공식 승인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무기판매 지연은 미중이 상대를 견제하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당분간 양국은 구조적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협력과 타협을 병행하는 '관리된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러한 미중의 전략적 '숨 고르기'가 미국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와 북중러 전략적 연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기존 동맹과 우방국과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전략적 균형도 필요하다.

키워드: 미중관계, 관리된 경쟁, 대만관계법, 양안관계, 대만 무기판매

미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하원의원이 8월 4일 대만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對대만 무기판매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올해 초 패트리엇(PATRIOT) 요격미사일, 지대공 방공체계 NASAMS 등을 포함한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판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절차가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하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맥콜 의원이 무기판매 지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대만 안팎의 주목을 끈 것이다. 그의 발언은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으며, 속셈은 무엇인가?

美 역대 최대 대만 무기판매 지연

140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무기판매안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말 하이마스(HIMARS ·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와 자폭 드론 등을 포함한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수출을 추진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지난 1월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심사를 통과했고,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걸쳐 공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해당 무기판매는 수개월째 백악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보류 중이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루비오 국무장관은 “무기판매 계획이 철회되거나 중단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2026.6.2). 하지만 미국의 이례적인 대만 무기판매 최종 승인 지연을 계기로 미·대만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던 것처럼, 대만 안보가 미·중 협상의 거래 대상으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다시 확산 중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미국의 대중 강경파는 미국이 대만 방위 공약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속히 최종 승인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몇 차례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대만관계법」과 트럼프 변수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미·중이 오랫동안 갈등해온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1979년 미·중 수교와 동시에 대만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만의 안보를 지원하고 미·대만 간 실질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그 핵심이 바로 같은 해 제정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다. 이 법은 미국이 대만의 충분한 자위능력 유지에 필요한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무력이나 기타 강압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대만 안보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법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후 40여 년 동안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발해 온 쟁점이자, 미·중·대만 관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중국의 국력 신장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그리고 미국의 대중(對中) 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최근 들어 이러한 흐름은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규모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실시한 이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대응해 대만 민진당 정부는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을 늘리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기조를 유지·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이러한 흐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로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판매 패키지에 대한 최종 승인을 수개월째 미루면서 미국의 기존 관행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 이유로 대만에 무기판매를 수개월 이상 보류하거나 지연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행정부 내부 검토나 의회 심사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이번처럼 최종 승인만 남겨둔 무기판매가 장기간 보류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정책적 선택지를 공개적으로 열어두면서, 대만 무기판매를 둘러싼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과 전략적 모호성은 한층 커졌다. 이는 대만 무기판매를 단순한 안보정책이 아니라 미·중 정상외교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과거 미국의 대만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미·중의 속셈과 딜레마

트럼프 1기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혹은 디리스크잉(de-risking)을 추진해 왔으나, 스스로 양국 관계를 단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거래주의적 접근을 통해 미국의 이익, 특히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하면서도 중국과 경쟁을 ‘관리’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중국의 2020년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과 남중국해·그린란드 문제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미·중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AI 분야의 대화는 지속하려 한다. 즉, 미·중 경쟁은 지속하되 충돌에 따른 비용은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을 전제해야 하지만 미·중 경쟁이 관리 가능한 궤도를 벗어나 극단적인 대치로 치닫는 상황 역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중 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미국의 목전에 놓인 여러 현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9월로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을 성사하는 한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의 대규모 대중 수출 계약을 통해 농업지역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도 안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보잉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의 장기적인 공급 보장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부 기종과 도입 시점을 포함한 구체적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최종 계약 확정을 위한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트럼프의 과장이었는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미·중 경제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대외정책뿐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계속되는 중동의 불안정 역시 미국에는 또 다른 골칫거리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군사적 충돌의 교차 속에 역내 긴장이 지속되면서, 미국 으로서는 중동 문제와 대중국 전략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란과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밀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대만 무기판매를 연이어 승인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양국 관계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하는 ‘선’ 까지 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6년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4.3%로,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수와 투자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AI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즉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장기적인 미·중 전략경쟁에 대비해 자국의 기술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최대한 축적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고, 적어도 첨단기술 자립과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전략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중국 역시 안보, 핵심이익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외교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채널을 열어두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미얀마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이자 연구자인 민진(Min Zin)을 쿤밍 공항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하고(2026.6.3), 반간첩 활동을 확대하며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가안보 문제에서는 미국에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첨단기술 분야의 대화를 지속하면서 양국 관계가 통제 불가능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국제시장과 자본에 대한 접근성은 유지하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립도를 높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스스로 전략적 선택을 제약한다. 중국이 미국의 무기판매에 과도하게 반발할 경우 오히려 대미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중국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을 더욱 강화한다면 중국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고도화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9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민 방문을 비롯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하반기에 집중된 정상외교의 기회를 활용해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으로서는 이 기간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공식 발표해 정상외교의 분위기가 훼손되고, 미·중 간 치열한 힘겨루기에서 중국이 미국에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상황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강경한 공개 발언과 달리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를 즉각 철회시키는 데 있다기 보다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강도를 낮추고 무기판매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며, 특히 이번 무기판매 안전의 공식 승인 발표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 회복과 체제 안정뿐 아니라 첨단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장기적인 미·중 전략경쟁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계산과도 맞닿아 있다.

전략적 시사점과 우리의 과제

결국 이번 무기판매 절차의 진행 지연은 미·중 양국이 상대를 견제하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현재 미중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충돌하면서도 비공개적으로는 협력하고, 구조적 대립 속에서도 상황에 따라 수사적 타협을 도모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경쟁과 협력, 억지와 관리가 교차하는 다층적 관계임을 잘 보여준다. 양국은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필요한 역설 속에서 당분간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전략적 안정 (strategic stability)’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전략적 안정이란 경쟁을 지속하되 우발적 충돌과 과도한 비용은 관리하면서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현실적 선택이다. 지속가능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숨 고르기’ 인 셈이다.

대만은 미·중 양국의 구조적 딜레마가 충돌하는 전략적 시험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대만 무기판매 승인을 연기하거나 규모 축소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무역 및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안보 공약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가시화하며, 대만을 향해 국방예산 증액안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할 것이다. 즉, 대중 협상과 대만에 대한 부담 분담 압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다소 결이 다른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행정부 인사들의 행보는 트럼프의 발언과 모호성이 미국의 대만 방위 공약 철회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메시지 관리이자, 동맹국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만정책은 대통령 개인의 거래주의적 접근과 미국의 제도적·전략적 이해관계가 병존하면서 이전보다 전략적 모호성이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구도가 역내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 분석과 그에 대한 대비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세 파악을 바탕으로, 미·중의 ‘전략적 안정’ 및 ‘관리된 경쟁’ 구도가 우리에게 강요할 비용과 기회·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미·중이 ‘관리된 경쟁’ 을 위해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와 북·중·러 간 전략적

연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조정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양국이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핵심 안보이익이 미·중 협상의 변수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기존 동맹과 우방국과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 또한 추구해야 한다. 또한 미·중 양국의 경쟁 관리와 같이 핵심 국익과 국가적 원칙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되, 경제·비안보 분야 등 실리적 협력이 가능한 공간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